

전북 장애인 복지 · 교육수준 전국 하위권

JB우리카피탈 미안마 시장 진출

17개 시 · 도별 비교 결과

복지, 경북 등과 함께
‘분발등급’ 지역 지정

교육분야, 14위에 그쳐

전북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분야가 전국 하위권 수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호근 전북도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 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동·분석했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5.15점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이 하락했다. 이는 최근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복지분야와는 달리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전북은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남, 경북과 함께 최하위권



전북의 탄소 홍보하러 미국으로
을 이끌어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오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 본사를 방문 스킷 캠프(Scott A. Campbell) 부사장과 제임스 쇼우(James Shaw) 국제담당 이사 등을 만나 대한민국의 탄소법 제정과 전북의 탄소 상황을 설명하며 보잉사의 투자와 관심(관련기사 2면)

인 ‘분발등급’ 지역으로 지적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지역은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북은 교육 분야에서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대전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지역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과를 통해 각 지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물론,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원 충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도교육청 “짜맞추기식 왜곡이다”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시도교육감 책임 조항 없어” 반박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전가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 지적

〈속보〉과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혹평했다.

〈본보 5월 25일자 1면〉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짜맞추기식 왜곡이라며 25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할 의무가 있고, 시·도 교육청 대부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도 있다는 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률상 정점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권한이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

관이며,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시행령에 개별·구체·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위법에 관련 위임이 없는 상황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재원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전가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인

유·초·중등의 학교시설 및 안전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요인 개선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전가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감사원 결과를 일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부담에 관한 감사원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에 관한 기존의 방침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간 여건 차이와 형평을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형 기자

더민주, 지역위원장 공모... 전대·대선후보 경선 앞둔 경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각지 지역조직을 대표할 지역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지역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대선후보군의 물밑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부위원장인 이준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후보 공개모

집을 한다”며 “6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국 각지에서) 전체 공모를 해서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널리 공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에서 당선후 20대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무난히 지역위원장을 껴

잡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구에선 조강특위 차원의 정밀한 실사가 예고됐다.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맡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위원장의 공모가 시작되면서 8~9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와 내년 상반기 대선후보 경선을 대비하고 있는 더민주 내 각 계파는 지역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주 기자

JB금융그룹 JB우리카피탈(대표 이동훈)이 소매금융에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안마 시장에 진출한다.

25일 JB우리카피탈은 미안마 소매대출 시장 진출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B우리카피탈은 금융위원회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미안마 현지에 법인을 설립, 미안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인가 취득 후 현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JB우리카피탈 관계자는 “미안마 현지법인인 미안마의 최대 경제 도시인 양곡에 위치할 예정이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소매 금융의 노하우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 최적의 금융 상품을 미안마 현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B우리카피탈은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으로 지난해 관련 부서를 신설했으며 올해 초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 매일 INDEX

4면 도내 바둑영재 쑥쑥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OPEN

사업을 시작할 때도

CLOSED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대표 유준상

노란우산공제가 대한민국 사장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류금지
공제금은 입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보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후 2년간)

가입문의
063-214-6609

Google play App Store 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2016. 1. 1일 이후 가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가계용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비영리 공적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